

부 록

충청남도 및 남부권 각시군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장 갈등의 조정·해결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 ① 도지사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 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사항
-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 사항
- 3. 갈등영향분석 사항
- 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 ①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을 추진한다.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41호,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갈등”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2.“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범위)

-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중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관리

제4조(갈등영향분석)

-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 4.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 5. 사회적 영향
 - 6.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군수가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7조(설치·기능) 군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과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 3. 갈등영향분석
-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자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시민단체 대표
 - 3. 금산군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의원
 -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1조(설치·운영)

-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위원

2.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 ③ 협의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되면 자동 해체한다.

제12조(의장 등)

- ①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갈등 각 사안별 분장사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협의위원"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위원 및 협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심의 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6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계룡시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30%이상 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시민단체 대표
 - 3. 언론인
 - 4. 시의회 소속의원
 -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

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① 시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 ①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 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1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논산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논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장 갈등의 조정·해결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① 시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35호,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